

현안과제연구

# Issue Report

2015. 06. 30

## 충청남도 2016년 도정 11대 의제 발굴

홍원표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wonpio@cni.re.kr](mailto:wonpio@cni.re.kr)

강수현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sh3737@cni.re.kr](mailto:sh3737@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충남 도정의 주요 의제를 미리 파악하여 선도적인 도정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

### 요 약

#### CONTENTS

##### < 요 약 >

1. 문제제기
2. 분석방법과 절차
3. 2016년 국내외 도정 여건
4. 2016년 도정 의제 도출
5. 결론 및 제언

- 2016년은 지역 간 치열한 산업경쟁,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역개발의 쟁점화가 예상되고 있음
  -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각 나라 또는 지역은 경제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복지·안전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절실해지고 있음
  - 2016년은 민선6기 3년차이자 총선의 해로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통해 33건의 의제 후보군과 11건의 의제를 도출함
  - 9개 분야에서 33개의 의제 후보군을 도출한 후 전문가 검토·평가를 통해 11건의 의제를 최종 도출함
  - 11건의 의제는 ①장항제련소 오염토지 활용, ②KTX 공주역 활성화, ③서산 지방공항 활성화, ④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자체 역할, ⑤수소 밸리 구축 전략, ⑥가축 전염병 예방 체계, ⑦주력산업고도화 관련 지자체 정책, ⑧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변경, ⑨지역 재난안전 체계, ⑩지방외교3.0, ⑪이주(농촌)노동자 정책 공백임
- 2016년 도정은 주요 지역개발사업과 『충남경제비전 2030』, 『환황해 프로젝트』 등 계획의 사업화를 양 축으로 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민선6기 3년차와 총선의 해이므로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주요 계획의 사업화를 둘러싼 도민들의 관심이 증폭될 것이므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이 긴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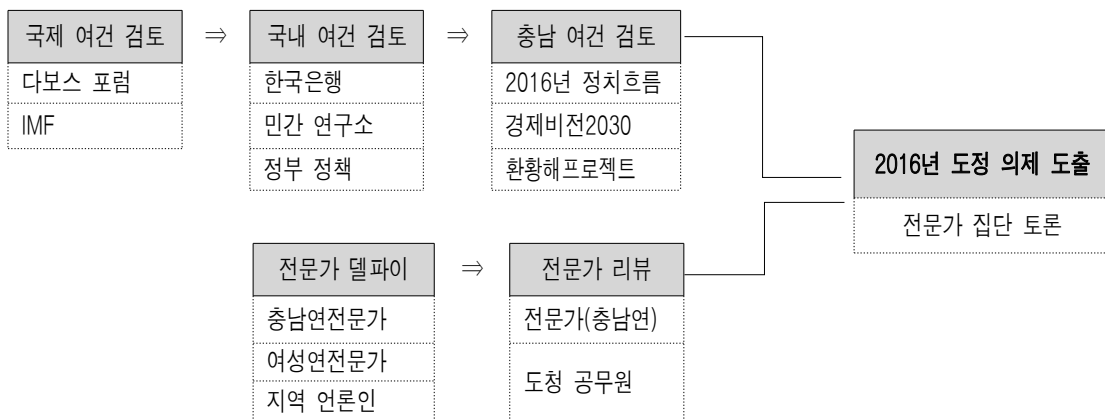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국내외 여건의 변화가 빨라지고 정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도정의 의제<sup>1)</sup>를 선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국내외 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민첩하게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정책형성 단계에서 정책 결정을 거쳐 정책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정책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충남도는 도정의 선제적 발굴 및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종전에는 차기년도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고민이 주로 예산편성개시 시기인 8월에 개시하였으므로 발굴된 과제가 차기년도 예산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발굴의 적시성이 미흡
  -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기년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조기에 진행하여 정책과제 발굴이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여건 및 도정 흐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6년 충남도정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것임
  - 국내외 여건 및 충남의 정책 흐름을 진단하여 2016년 도정 의제의 맥락을 살피고자 함
  - 또한 충남연구원 등 도 산하 정책연구기관 및 지역 언론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정 의제를 발굴하고 종합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자 함

1) 본 연구에서 의제란 도의 정책결정 전 단계에 있는 이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라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도지사 공약, 실시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16년 도정 의제 도출을 위해 사회적 맥락 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병행함
  - 글로벌, 국내, 지역 차원의 여건을 분석하여 2016년 도정 의제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
  -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통해 2016년 도정 의제 후보군을 도출하고 전문가 집단 논의를 통해 최종 의제를 도출
- 전문가 델파이 관련 정책 영역을 9개 분야로 설정하고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의 개별 인터뷰와 집단 토론을 통해 의제를 도출
  - 충남연의 9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였음: 도시·지역, 교통·물류, 환경·에너지, 농업·농촌, 산업·경제, 문화·관광, 행정·복지, 여성·가족, 교육·의료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 진행
  - 전문가 인터뷰는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지역 언론인이 참여하였으며, 집단 토론은 면대면 토론을 주로하고 서면 의견 수렴을 보조적으로 진행
- 연구 수행 절차는 국내외 여건 검토, 정부의 정책 기조, 충남 도정의 주요 내용을 각각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델파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그림] 연구수행절차도

### 1) 국내외 여건 검토

- 2016년 주요 리스크로 국가 간 갈등, 사회 불안정, 저고용, 기상이변, 사이버 테러 등을 제시(2015년 다보스포럼 中 2016년 예측)
- IMF는 유가하락, 미국의 경제성장, 세계경제성장의 하향전망, 신흥국 소비심리 변화,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구조 개혁 등을 전망하고 있음
  - 유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나, 신흥국에게는 그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제성장, 유럽, 일본의 침체, 신흥국의 중규모 성장이 예상됨
  - 각국은 경제구조를 바꾸고 국제 경쟁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자원이 구조 개혁에 동원될 것으로 예측됨
- 한국은행은 2016년 한국경제전망에 대하여(경제전망보고서 2015.04.),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 및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인한 경제성장률 소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2015년 3.4% 수준에서 2016년 3.7%로 예상
  - 취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현상 지속, 여성 및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 등에 따라 2015년 42만명에서 2016년 38만명 증가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9%에서 2016년 2.2% 전망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5년 960억 달러에서 2016년 72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되며,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7%에서 5.7%로 전망
- 정부의 2016년 정책기조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및 경기 활성화, 재정지출 구조 개혁 등의 재정개혁, 복지·안전 관련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임

- 2016년은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요인으로 인해 저금리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 →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구조조정 내지 민영화 가속화 예상
- 재정개혁은 자원배분 합리성 제고, 재정지출비효율성 차단, 재정운용 신뢰성 강화 등에 중점 →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평가 압력 가중
- 기초노령연금, 광역지자체 재난안전전담기구 설치 등 지자체의 복지·안전 책임이 강화 → 예산지출 소요 증대로 인한 지방 예산 압력 가중

● 민간 경제는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 부동산 경기의 정체, 국내투자의 미비와 해외투자의 적극화가 예상됨

-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엔저 등으로 인한 국내수출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지속되어 수출 감소 예상 → 충남 소재부품 수출에 영향
- 부동산 경기는 올해 5월 인허가·분양·착공이 전년 대비 30~50% 증가하여 2016년에는 상대적 소강상태 예상
- 국내 신규 투자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가운데 해외투자는 지속 증가 예상 → 현기차 중국 제3공장, 삼성SDI, LG화학의 이차전지 중국공장 착공 등으로 인해 충남 미래성장 동력 반감

● 이외,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헬스케어 산업 육성, 국토부의 도지재생사업,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미래창조부의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R&D육성 사업 본격화 예상

-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년)에 의거 해양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는 전략 추진 중
- 도시재생사업 선도 사업으로서 충남 천안·공주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진행과정 중 일단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업체별 할당액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 광역 지자체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R&D거점 육성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

## 2) 충남의 주요 여건

- 2016년은 민선6기 3년차로 도정 성과의 가시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
  - 2016년은 이전 2년간의 준비를 거쳐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도정 비전에 상응하는 성과를 가시화하여야 하는 단계임
  - 따라서 추진 사업의 마무리, 미진 사업의 박차, 신규 사업의 가속화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성과의 가시화는 주로 물리적 개발, 제도상의 변화 등을 통해 수반하므로 각종 개발사업, 제도 변화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임
  
- 2016년 총선을 지역 발전의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준비 필요
  - 총선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개발 현안이 제출될 것이며 이것이 무분별한 공약이나 개발 사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요 이슈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총선 특성상 개발 사업이 초점이 되므로 주요 개발 현안에 대한 도의 선제적 검토 및 개발방향 정립 시급 예)안면도 관광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 올해 충남이 중점 추진 중인 『충남경제비전 2030』 과 『환황해 프로젝트』 의 후속 조치 및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충남경제비전 2030』 은 경제산업실 소관으로 비록 경제비전이기는 하나 그 범위가 방대하며 다양한 분야의 실행전략을 포괄하고 있음
  - 『환황해 프로젝트』 는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6개 전략, 13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외 정책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충남경제비전 2030』 은 충남 수소밸리 구상,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성장산업 육성, 혁신경제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혁신 파크, 행복 공감 마을학교 등이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음

키 워 드	주 요 시 사 점
수소밸리 구상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와 연계되어 충남 수소경제 로드맵 및 실행전략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산업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접점을 찾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
혁신경제생태계 구축	충남의 혁신을 선도할 선도기관의 구축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사회적 경제 혁신 파크	사회적 경제의 GRDP 1% 확보를 위한 거점 조성을 초점으로 할 것으로 예상
행복 공감 마을학교	낙후지역 새로운 학교모델로 제시되며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을 추진될 것으로 예상

- 『환황해 프로젝트』 은 아시아 협의체 구성, 대중국 관광마케팅 전략,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음
  - 아시아 협의체 구성은 기존 유사 협의회와의 차별성 및 충남의 주도권 확보 방안이 중심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대중국 관광마케팅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충남 관광비전 학술용역」 과 연계되어 관광객 유치 전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
  - 관광인프라 구축은 구체적으로 안면도 관광지 투자유치, 서산 대산항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

### 3) 국내외 및 지역 여건 분석의 시사점

- 국내외 경제 여건은 지역 간 치열한 산업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충남 차원에서 산업 및 경제 저력을 기를 것을 요구받고 있음
  -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각 국가·지역은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역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존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중앙과 지역과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도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 복지·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재정개혁으로 인해 예산규모 및 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임
  - 지역 의제에 대해 공무원 자체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역량 결집과 의제의 대응이 필요
- 2016년은 민선3기 3년차로서 도정의 성과를 가시화할 시점이며, 총선과 맞물려 지역개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 선도가 긴요
  - 현재 일부 개발 사업이 미진한 가운데 총선 등 정치 일정으로 인해 개발 이슈가 부각될 전망
  - 정책 선도를 통해 정치 일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총선을 도민의 견수령의 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정부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2016년 충남 도정 의제 도출

# 04

### 1) 도정 의제 후보군 도출

●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기법을 통해 2016년 도정 33개 의제 후보군을 파악(상세내용은 부록1 참조)

- 충남연구원 7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인, 지역 언론인 3인 등 11명이 면대면 인터뷰,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의제 후보군 발굴에 참여
- 발굴 결과, 도시·지역 5건, 교통·물류 3건, 환경·에너지 4건, 농촌·농업 3건, 산업·경제 5건, 문화·관광 3건, 행정·복지 4건, 여성·가족 3건, 교육·의료 3건 등 총 33건임.

분 야	건수	의제 후보 제목	비고
도시·지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활용</li> <li>KTX호남선 공주역 활성화</li> <li>내포신도시 민간투자 유치 촉진</li> <li>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li> <li>충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li> </ul>	
교통·물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진DRT사업 확산</li> <li>서산 지방공항 활성화</li> <li>대산항 항만 활성화</li> </ul>	
환경·에너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목록 제척</li> <li>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자체의 역할</li> <li>전력요금 차등화 입법화</li> <li>수소 밸리 구축전략</li> </ul>	역제안 의제
농촌·농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물림 농가 육성</li> <li>가축 전염병 예방체계</li> <li>농촌의 계절노동수요 수급 연결</li> </ul>	

산업·경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산업고도화 관련 지자체 정책 점검</li> <li>• 미래성장산업 육성전략 검토</li> <li>• 지역혁신생태계 선도기관 구축</li> <li>•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변경</li> <li>• 사회적경제 지역거점 조성</li> </ul>	
문화·관광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헬스케어</li> <li>• 안면도 관광지 개발</li> <li>• 명품 섬 조성</li> </ul>	
행정·복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재난안전체계</li> <li>• 지방외교3.0</li> <li>• 지방재정지출 자정기능</li> <li>• 내포시 신설</li> </ul>	
여성·가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 자녀 지원 정책</li> <li>• 이주(농촌)노동자 정책 공백</li> <li>• 충남 경력단절 여성 대책</li> </ul>	
교육·의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 공감 마을학교 모델 수립</li> <li>• 농업고등학교 졸업자의 영농후계자 육성</li> <li>• 지역의료 체계 간 연결 시스템 구축</li> </ul>	
(합계)	33		

## 2) 2016년 충남 도정 11대 의제 도출

● 도출된 의제 후보군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종 11개 의제를 도출함

- 각 분야 전문가 7인의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의제 선별
- 의제 선별기준은 시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하고 3가지 요소에서 “높음”을 기록한 의제를 최종 의제로 선정(부록1 참조)

● 11대 의제는 다음과 같음 (무순)

- ①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활용**: 서천지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보고로서 수익성 개발을 검토 중인 환경부의 토양관리시범단지 사업에 대해 충남도는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개발방향을 모색해야 함
- ② **KTX호남선 공주역 활성화**: 신설 공주역은 충남 낙후지역에 위치한 정차역으로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나 현재 매우 미흡함
- ③ **서산 지방공항 활성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수립 즈음하여 서산비행장이 지방공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남 최초의

지방공항에 대한 전략적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

- ④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자체의 역할:** 2015년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도 온실가스배출상쇄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수익창출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⑤ **수소 밸리 구축 전략:** 『충남경제비전2030』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서 2016년에 그 실행전략을 둘러싸고 에너지 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됨
- ⑥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축산농가 밀집지인 충남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사후처리 위주의 기존 가축방역체계를 탈피하여 효과적인 예방중심 방역체계 구축으로 정책 전환 필요
- ⑦ **주력산업고도화 관련 지자체 정책 접점:** 산업고도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영역이었으나 최근 추진 중인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산자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및 국토연구원이 제기한 ‘산업도시발전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접점을 찾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⑧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변경:**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당진·평택항의 시계분쟁, 조력발전소 논란 등 새로운 여건 변화를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1995-2011) 변경이라는 큰 틀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⑨ **지역 재난안전체계 구축:** 2015년 신설되는 재난안전실의 미션, 업무범위, 추진체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향후 역내 발생 재난재해에 지자체의 책임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형식적 조직 신설보다는 실질적 전담기구와 사업체계 긴요
- ⑩ **지방외교 3.0:** 『환황해 프로젝트』의 추진을 계기로 지자체 외교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상황으로, 공공기관 교류친선(1.0), 민간기업 지원(2.0)을 넘어서는 도·시·군 대외협력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함
- ⑪ **이주(농촌)노동자 정책 공백:** 충남 농촌지역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공백인 상황이며, 이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자와는 상이한 성격으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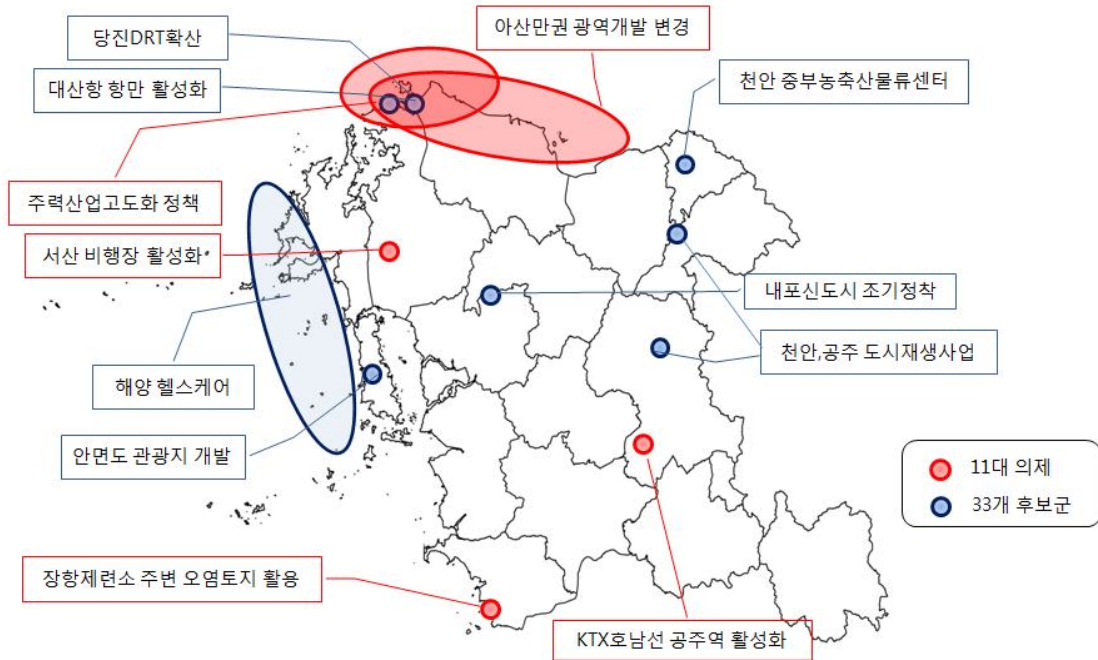
● 11대 의제와 33개 후보군의 지역 분포는 비교적 시·군 간 고른 분포를 보이거나 남부권(서천, 부여,논산, 금산 일원)이 비교적 적은 상황임

- 시·군 단위에서는 서산시가 3건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임(대산항

항만 활성화, 서산 지방공항, 주력산업고도화 정책 접점)

－ 반면, 남부권은 장항제련소 건을 제외하고는 의제가 없는 상황임

※ 단 현재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 보령-안면도 연육교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의제가 없는 것이 문제시되지 않을 것임



[그림] 의제 후보군의 지역 분포(지역성이 분명한 의제에 한함)

-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2016년 충남도정 33 건 의제 후보군과 11건 의제를 도출함
  - 주로 문헌 리뷰를 통해 국내외 여건과 충남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
  - 33건 의제 후보군은 각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함
  - 11건 의제는 의제 후보군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
- 2016년은 민선6기 3차 년도이자 총선의 해로 지역개발사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큼
  - 시기적으로 지역개발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로서 일부 미진한 개발사업에 대한 선제적 정책방향 수립 및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지역의 활용방안, KTX호남선 공주역 활성화 등은 광역적 내지 전국적 관심 의제임
- 따라서 2016년 도정 방향을 설정할 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함
  - 기존 개발 지역과 미개발지역의 경계가 현재 당진, 서산, 태안, 예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 개발현안을 둘러싼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도의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 대응이 긴요
  - 특히 미진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 정책방향 수립 및 제시 필요
- 한편, 『충남경제비전 2030』, 『환황해 프로젝트』는 향후 도정의 핵심시책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전략의 사업화가 2016년 도정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예상

- 『충남경제비전 2030』 과 『환황해 프로젝트』 에서 도출된 전략이 각종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단계가 2016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도민의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기대
- 전략의 사업화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2017년 이후 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음.

## ◆ 참고 자료 ◆

- 관계 부처 합동,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2014.3.5.
- 관계 부처 합동, 정부통합보도자료, 2015.1.13.
- 관계 부처 합동, 『국민행복 분야 통합보도자료』, 2015.1.15.
-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 분야별 공약 연차별 추진실행계획』, 2014.12.31.
- 충청남도, 『2015년 주요업무계획(도의회 보고자료)』, 2015.1.27.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5.4.
- 한국은행, 『2015년 대전충남지역 경제전망』, 2015.1.
- MUFG, 『2015/2016 세계경제전망』, 2015.1.15.(일본어)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5, 10th Edition』, 2015.1.
- World Economic Forum,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2015』, 2015.1.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2015』, 2015.1.

# 부록 1 : 2016 | 충남도정 의제 후보군 일람

분야	연번	어젠다 후보	현황	중요성	우선순위 (○: 높음, △:중간, ×:낮음)				
					종합	의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
도시지역	1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토지(Brown Field) 활용	장항제련소 반경 1.5km 중금속 오염 토지 정화 및 토지매입사업('09~'17년, 약 2,900억, 이중 도비 55억) 추진 중, 환경부는 토양관리시범단지 중심의 수익성 개발을 검토 중이나, 충청남도는 공유지를 중심으로 전략적 개발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	① 국제적 위상 :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대양주 물새 보전네트워크 의장국('09~), 장항읍 유부도는 UN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세계철새 이동 경로상의 생태관광개발 프로젝트 대상지('14)로 선정, 장항 송림갯벌은 람사르습지('09)로 지정, ② 국가적 위상 : 일제강점기 장소성·역사성 보유, 군산·장항권 광역개발계획('95)의 장항산업단지에 대한 대안사업(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추진, ③ 광역적 위상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10~'20)의 핵심사업지역	○	○	○	○	△
	2	KTX 호남선 공주역 활성화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의 공주역('15년 3월 개통)은 충청남도 낙후지역에 위치한 정차역으로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나, 공주역 활성화 방안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① KTX 공주역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에 의한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핵심거점이자 세종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금강코리도(Corridor)의 중간기착지, ② 세종시 남부 관문역, ③ 기호유교문화권, 백제문화권의 관문, ④ 미래주력산업인 BT·IT 산업과 국방산업을 새롭게 결합한 차세대 융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거점	○	○	○	○	×
	3	내포신도시 민간투자유치 촉진	내포신도시의 초기생활권은 조성되었으나, 도시핵심시설이나 경제적 자족성(성장동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	내포신도시의 계획인구(10만명) 달성을 위해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바, 신도시와 주변지역에서 기반부문의 고용(지역적 수용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함	△	△	○	○	×
	4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청 실국이나 관련 주체별로 사업을 제안 중이며, 현재 부지 활용에 대한 방침결정은 없는 상태임	정부정책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충청남도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공간과 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자 중요한 사업임	△	○	△	○	×
	5	충청남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선도지역인 천안·공주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기간을 마련 중이고, 나머지 일반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절차가 진행 중임.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 추진부처를 국토부와 농림부로 양분하면서 정책환경이 변하였고, 이에 따라 충남도나 시·군이 도시재생정책 방향이나 역할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있음	도시재생은 시대적인 조류인 바, 중앙부처의 정책환경에 휩쓸리기 보다는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주민 및 활동가 역량 강화에 선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가칭 충남형 도시재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	△	△	△



분야	연번	어젠다 후보	현황	중요성	우선순위 (○: 높음, △:중간, ×:낮음)				
					종합	의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
교통물류	6	당진DRT사업 확산	당진DRT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도 전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임	당진DRT를 도내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대중교통체계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	△	○	○	×	△
	7	서산 지방공항 활성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서산비행장이 정부의 지방공항계획에 편입 가능성이 있음	서산비행장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지방공항계획에 편입됨과 동시에 전략수립이 뒤따라야 함	○	○	○	○	△
	8	대산항 항만 활성화	2016년 여객선 취항에 따라 항만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는 간헐적 논의만이 있는 상황임	도와 서산시 등 시·군이 협력하여 제대로 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만 성공가능성이 있음	△	○	△	△	×
생태에너지	9	조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목록 제척	조력발전이 생태환경에 대한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RPS의 신재생에너지 목록에 남아있어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음	정부 역제안 과제로서, 해안생태계에 대한 교란이 심각함에도 발전사들이 조력발전소를 구상하는 법적 근거를 없앨 필요가 있음	△	○	△	×	○
	10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서 지자체의 역할	올해부터 정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며 지자체도 온실가스배출상쇄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수익창출을 고민해야 함	환경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가 행위자로서 참여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 기대	○	○	○	△	○
	11	전력요금 차등화 입법화	전력요금 차등제가 입법화되어야만 일단락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전력요금 차등제는 에너지의 소비와 생성을 분리해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	○	×	△
	12	수소밸리 구축 전략	경제비전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서 현재 대략적인 방향만 있을 뿐 실행전략이 없으므로 2016년에 논란이 예상	현재 무엇을 계기로 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수소경제가 구호에 그칠지 실질적 성과를 낼지 결정될 것임	○	△	○	△	○

분야	연번	어젠다 후보	현황	중요성	우선순위 (○: 높음, △:중간, ×:낮음)				
					종합	시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
농촌농업	13	대물림농가 육성	귀농귀촌의 정착률 제고와 귀농귀촌의 실질화를 위해 귀향인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 필요	귀농귀촌이 해당 농촌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물림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	△	△	○
	14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충남에서 전염병 관련정책은 지금까지 사후처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예산지출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예방체계 구축은 사후처리 위주의 기존 가축방역체계에 비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므로 예방중심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민간과 도민 개입여지가 적은 매뉴얼화로는 부족)	○	○	○	○	×
	15	농촌의 계절노동수요 수급 연결	시설재배농가의 계절 노동수요가 있는 반면, 도시지역 시니어들은 일자리 부족 상황에 있음	시설재배농가에게 도시 일손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통해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의가 있음(경북도 사례)	△	○	△	△	△
산업경제	16	주력산업고도화 관련 지자체 정책 점검	주력산업고도화는 통상 산업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산자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및 국토연구원이 제기한 '산업도시발전법'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접점을 찾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음	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국토연구원이 제기한 '산업도시발전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 접점을 찾아서 시행	○	○	○	△	△
	17	미래성장산업 육성 전략 검토	충남 미래성장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 차세대에너지산업이 있으며, 경제비전2030에서는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ICT융합,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이 제시됨	충남의 자원과 현황에 비추어 각 산업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의거하여 로드맵 작성 또는 수정 필요	△	△	△	△	○
	18	지역혁신생태계 선도기관 구축	충남에 R&D를 선도할 기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나 실행전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역량 있는 공공R&D기관을 유치 또는 육성해야만 충남의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이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음(KAIST분원 유치, 도립대학 정책대학원화 등)	△	△	○	△	△
	19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변경	해당 개발계획(1995-2011)을 YESFEZ 해제, 당진평택항의 시계분쟁 등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 안에 자유무역지대 등 정책을 내와야 하는 상황임	최근의 변화를 볼 때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시즌2를 수립하지 않고 개별 사안별 접근을 하면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임	○	○	○	△	○
	20	사회적경제 지역거점 조성	현재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활동중이나 예산제약으로 인해 네트워킹 촉진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을 집적한 지역거점을 창출하여 다양한 역량이 상호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경제비전2030의 충남형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	△	○	△	△

분야	연번	어젠다 후보	현황	중요성	우선순위 (○: 높음, △:중간, ×:낮음)				
					종합	시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
문화관광	21	해양 헬스케어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년, 10개년계획)의 역점사업으로 해양 헬스케어가 제기되고 있음	정부의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서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지원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임	△	△	△	△	△
	22	안면도 관광지 개발	올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백지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며, 도유지가 많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도가 적극 대응해야 할 사안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방식과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 투자유치정책을 펼 필요가 있음	△	△	○	△	×
	23	명품 섬 조성	충남에 30개 남짓 섬이 있으나 낙후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을뿐 이를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충남의 섬을 자산으로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충남의 이미지 개선 모색(전남 신안 증도 사례)	×	△	△	△	△
행정복지	24	지역의 재난안전체계 구축	행자부 지침으로 광역지자체가 재난안전전담기구를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충남도 재난안전전담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나 그 미션과 임무, 업무범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임	향후 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전담기구 내지도지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실질적인 전담기구와 사업체계 간요(일본의 지자체 간 스크럼 체계)	○	○	○	○	△
	25	지방외교3.0	올해 ‘환황해 프로젝트’의 추진을 계기로 지자체 외교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도·시·군 대외협력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함	국제 협의회체 회의가 빈번해져 가는 지금 지방외교에서 충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충남 지방외교의 지속가능성과 주도성 확보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	○	△	○	○
	26	지방재정지출 자정기능	정부예산의 재정지출낭비 관리감독이 심화됨에 따라 예산감축 및 자체 예산절감 기제를 갖추라는 압력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	지방재정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자체 자정기능을 갖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선도적 대응책이 필요	△	○	×	△	△
	27	내포시 신설	내포신도시가 흥성과 예산에 걸쳐 있어 조기정착과 업무효율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집단에너지, 폐기물처리 등)	흥성군과 예산군을 통합하여 내포신도시를 신설하거나 내포신도시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확정하는 것이 행정공백예방을 위해 바람직	×	△	○	×	×

분야	연번	어젠다 후보	현황	중요성	우선순위 (○: 높음, △:중간, ×:낮음)				
					종합	시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
여성가족	28	중도입국 자녀 지원 정책	최근 결혼이민에서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이전 혼인에 의한 외국인 자녀들이 이주해와 함께 사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결혼이민의 출산에 의한 2세와는 달리 생소한 문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적응 지원이 절실함	×	△	×	○	△
	29	이주 (농촌)노동자 정책 공백	충남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은 현재 고용정책 측면에서만 고려되고 있을 뿐 지역차원에서 정책은 공백인 상황임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결혼이주자와는 상이한 성격으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	○	△	△
	30	충남경력단절 여성 대책	충남은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농촌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들이 대부분 고학력인데 이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차원에서도 자원낭비인 상황임	×	△	△	×	×
교육의료	31	행복 공감 마을학교 모델 수립	취학아동 감소와 공교육의 한계로 인해 낙후지역 학교교육이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학교'모델이 제기되고 있음(아산 거산초 사례)	학부모와 교사가 마을의 주체가 되어 학교가 마을의 핵심거점이 되는 새로운 지역사회 학교모델이자 공유경제의 구체적 사례가 될 것임	△	△	△	△	△
	32	농업고등학교 졸업자의 영농후계자 양성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 농업고등학교 학생의 농업 종사의향이 매우 낮고 농업종사인력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농업고등학교 졸업자를 농업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도립대학에 농업관련 학과를 증설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	×	△	△	×	△
	33	지역의료 체계 간 연결 시스템 구축	충남은 지역환자 역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최저인 지역으로, 도민들을 위한 지역의료 체계 간 연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자체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역의료기관 간 연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필요	×	△	×	×	×